



독일 대학개혁의 비틀거림

정 유 성 |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들어가며 : 군말

벌써 몇 달 전 편집진 한 분이 미리 이런 글로나마 답답한 한국 대학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줌 주자는 제안을 하셨다. 그 때는 독일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막 돌아와 뜻과 마음이 새로울 때라 서슴없이 그러마고 했다. 하지만 막상 청탁을 받자 마다할 수는 없었지만, 무척 망설였고, 또 괜한 짓을 했지 후회막급이었다. 이제 정작 쓰러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캄캄하기만 해, 알곳은 붓방아, 아니 컴퓨터 방아만 쪼으며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다 마감에 두고야 서둘러 이런 서툰 사실로 글을 열고 있다. 그 까닭은 이렇다. 먼저 독일에서 10년 넘게 공부하여 '도로아미타불' 께나 읊는 터지만, 명색이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기껏 코끼리 몸 한 구석이나 더듬을 것이 뻥한 짧은 글로 독일 대학교육의 가닥을 짚어 보기란 처음부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독일 대학은 적어도 내게는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그 낯선 땅

에서 남들이 먹다버린 지식의 찬밥덩이를 구걸하고 돌아와서도 자주 드나들었고, 지난해엔 모처럼 얻은 안식년을 고스란히 독일 대학 언저리에 머물며 보냈다. 그뿐인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준비, 또 학술연구 지원방안 연구 등 대학 관련주제로 요 몇 년 사이만 해도 몇 차례 드나들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 터였다. 그러니 알만큼은 알며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 입은 근질근질 하되, 되는 소릴 하자니 힘은 부치고, 밀린 숙제 해치우듯 써보자니 객쩍은 글이 될 것이 불 보듯 환하다.

그래도 이나마 써보려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이 뒤집힐 듯 떠들썩하게 벌어진, 아니 벌어지다 만 이 땅의 굶판 탓이다. 절반의 성공이든, 실패든 한편으론 한국의 정치 뿐 아니라 사회전반, 특히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것이 늘 그렇듯이 오래된 새 모순, 새로운 옛 모순에 발목 잡혀 일을 반 넘어 그르치고 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애써서 사람다운 세상 만들려는 바람과 힘이 모여 작지만 뜻 깊

“

독일 대학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대학문화, 곧 근대 대학의 이상을 설정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기존의 대학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변혁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화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든 문명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대해

독일 대학 나름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에서 온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은 물꼬를 튼 것만 해도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 거둬 뿌리가 너무 깊은 걸림돌에 걸려 제대로 흘러 넘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확인된, 솟구치는 물줄기를 어떻게 삶 구석구석에 스미게 하고, 사람 생각하며 사람 대접하는 삶터를 일구어 갈까 하는 걱정과 함께 산처럼 쌓인 과제들이 새삼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또한 복잡하기만 한 교육이라는 문제는 그저 여기저기서 구시렁대기만 할 뿐 뉘 손이 뜨고 여간해서 뉘가 시작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전공한 죄로 늘 앓게 되는 직업병이며 산업재해인 이 교육걱정 탓에 하릴없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도 빌어 거둬 교육을 바로 잡고, 사람을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나마 전해 볼까 해서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툰 글을 적어 본다.

II. 돌아보며 : 독일 대학문화의 일그러진 성장배경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은 아무

래도 바로 ‘시인과 철학자(Dichter und Denker)’의 나라라는 것일 게다. 그만큼 예술과 학문으로 일가를 이룬 나라라는 데 누구나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훔볼트(Humboldt)의 사상에서 비롯된 독특한 대학문화가 바로 그 학문의 산실이다. 언어학자며 철학자로 명성을 떨친 당대 대표적 지식인 훔볼트는 나폴레옹과의 전쟁 이후 결단이 날 위기에 처한 프러시아에서 교육정책을 떠맡고 있는 베를린에 대학을 하나 새로 세웠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일반적이었던 중세의 어두움이 짙은 기존 대학과는 다른, 새로운 대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대학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 이상은 한 마디로 대학이란 어떤 특정 목표에 따라 썩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격 ‘도야(Bildung)’ 기관인 만큼, 학문적 인식을 통해 자발적이고 도덕적 인격형성을 위한 인간교육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 대학의 국가권력으로부터

터의 독립이며, 둘째로 교수의 학문발전의 권리와 그 장려, 셋째로 학생의 참여 등이다 (Arbeitsgruppe Bildungsbericht am Max Plank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1990 : 375-380 ; Blankertz, 1982 : 130-134).

그 뒤로 독일대학은 이러한 이상을 좇아 19세기 동안 지성의 상아탑을 제법 높이 쌓아 올렸다. 하지만 뒤늦은 민족국가의 형성, 서두른 산업화의 여파로 제국주의와 나치 시대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안팎으로 피폐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인격도야에 매몰되어 현학적인 유리알 유희에 빠지거나, 다른 한편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념에 치어 지식을 이데올로기에 종속시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 등이 그렇다. 무엇보다도 나치 시대 학문과 예술의 나라에서 전대미문의 야만, 폭력이 횡행하는 20세기 최대의 죄악상, 곧 인류적 범죄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에 알게 모르게 연루된 대학 또한 철저한 타락과 몰락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Gamm, 1964).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단 '탈(脫) 나치화(Entnazifizierung)' 정책과 더불어 냉전 시대의 대두와 함께 '마샬 플랜'에 따른 막대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 그리고 기왕의 과학 기술력에 힘입어 흔히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급속한 경제부흥과 사회재건을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대학은 점령당국과 그 뒤를 이은 독일 연방정부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 그 초석이 되었고, 스스로 거듭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

었다. 이렇게 형성된 전후 독일 대학문화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조직과 운영의 자치 및 분권원칙이다. 독일은 '문화 전반의 각 주 정부 주권원칙(Kulturhoheit der Länder)'에 따라 모든 교육의 조직과 운영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관할로 교육 자치 정착과 다양한 교육 문화 발전을 꾀한다. 게다가 독일 학교교육은 대학까지 포함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운영되며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공립(주립)이다. 아울러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¹⁾

둘째, 전통적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따른 교수진 구성이나 학사관리 체제다.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및 대학자격 시험인 아비투어(Abitur)로서 절대평가에 의한 시험으로 결정하며 법대나 의대 같은 인기전공의 경우에만 입학제한(Numerus Clausus)을 둔다. 전공에 따라 교육과정도 다양하기한데 대체로 인문과학 쪽의 '학·석사 과정(Magister)'과 사회과학 및 자연계열의 '디플롬 과정(Diplom)'으로 나뉜다. 그 후 박사과정(Promotion)으로 들어가며 비교적 전통적인 도제제도에 따라 지도교수를 아버지라 부를 만큼 그 권위와 종속관계가 심한 편이다. 대학교수의 구조 또한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박사과정 이후, 교수자격 과정(Habilitatation)을 거쳐야 하며 전공영역 뿐 아니라 '석좌(Lehrstuhl)'라는 상징적 의미의 개인 중심 인적 구성요소

1) 모든 기본적인 법제는 '연방 대학교육 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des Bundes)'을 그 바탕으로 한다. 1969년에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관련 교육조직과 운영의 책임과 권리를 주 정부에 위임하며 연방정부는 다만 기본방침 제시와 각 주들 간 교육정책의 조정 역할에 머문다(ibid; <http://www.bmbf.de/de/757.php>).

가 강하게 작용한다(Arbeitsgruppe Bildungsbericht am Max Plank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1990 : 370-374).

셋째, 연구의 독립성과 자발성, 그리고 연구소 체제와의 연계구조다. 독일 대학 자체도 상당한 연구력을 가졌지만, 대학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잘 발달하여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 공학은 프라우엔호퍼 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 등이 유명하다. 연구 재원은 중앙정부, 주정부, 기업 등이 골고루 부담하며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각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력을 자랑한다.²⁾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독일은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학문 선진국의 하나다.

Ⅲ. 살펴보며 : 독일 대학개혁의 흔들리는 진행과정

독일의 대학문화는 그러나 지난 6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학생혁명 시기와 독일 통일 그리고 유럽통합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시련과 도전을 겪으면서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하게 된다. 먼저 냉전논리에 따른 보수적인 대학운영과 교수진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파시즘 잔재 및 성향에 반발하는 68학생운동이야말로 전후 첫 번째 대학개혁의 물꼬를 텄다. 전후 세대가 대학생이 되자 이들은 대학으로 표상되

는 기성세대, 특히 기득권층의 보수성과 그 뒤에 도사린 파시즘의 망령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모든 권위에 대한 '위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학사회의 수직적인 질서, 권위주의, 사회적 참여의 부재 등을 비판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전쟁반대와 환경보호, 나아가 대안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여 대학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개혁과 가치전환을 촉구했다. 68학생운동은 비록 전반적 사회변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보수당인 기민당의 장기 집권을 막고, 처음으로 시민당과 같은 진보세력이 집권하여 그 상징인물인 브란트(Brandt)가 '동방정책(Ostpolitik)'을 펼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정치 및 사회문화의 지형 변화에 기폭제 노릇을 했다(Wesel, 2002).

예컨대 이를 계기로 시작된 대학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노력이 그렇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문과 직업교육으로 서열화되어 분리된 중등학교 조직을 재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중산층 이하 노동계층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제도(Bafög)'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이를 통해 독일 대학은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새로운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하지만 대학의 정치참여가 테러리즘, 또는 '제도 안의 대장정'으로 양분되면서 일단 이러한 흐름은 물밑으로 숨고, 70~80년대 경제 호황을 맞아 등장한 소유

2)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독일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과 기술력을 자랑한다. 예컨대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첨단기술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19.4%에 이어 14.9%로 2위, 전문 학술지 논문수록 비율도 미국 32%, 일본 10%에 이어 9%로 세계 3위의 수준이다(<http://www.bmbf.de/de/2303.php>).

지향적 문화가 풍미하고 만다.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과 교사들은 꾸준히 교육을 더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질도 높이고자 애썼지만, 정작 대학은 별다른 구조조정이나 변화 없이 여전히 그 껍데기 위용만 자랑하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몇 가지 눈앞가림만 한 채 기왕 쌓인 모순 안에 안주하고 만다.³⁾

1990년 그야말로 도둑처럼 찾아온 통일에 즈음하여 독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교육, 특히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흡수통합 형식의 통일인 만큼 옛 동독 지역의 대학들을 일방적으로 포섭하고, 옛 서독의 체제와 운영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일종의 내적 식민지로 삼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나아가 문화 및 학문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느라 막대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기 짝이 없고, 특히 옛 동독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심각하다. 슬한 인적, 물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봉합된 체

제 아래 남아있는 분단의 상처는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간다.⁴⁾ 무엇보다도 90년대 초, 경제호황기에 무리한 약속과 함께 줄속하게 흡수통합으로 진행된 통일과정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사회적인 혼란을 낳았고, 그 후유증은 15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다. 예컨대 기대했던 경제호황은 곧 장기적인 불황으로 바뀌고, 무리한 재정투자에서 온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그렇다. 그 와중에 독일 대학은 옛 동독 지역을 포괄하여 양적으로 팽창하고 누적된 인력수급 정체의 숨통은 트는 등 통일특수도 누렸으나,⁵⁾ 전반적인 연구력 약화 등 치명적인 결손을 안게 된다.⁶⁾

이런 와중에 급기야 통일을 주도했던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지난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진보적 연립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나 워낙 누적된 통일과정의 문제가 심각하여 가까스로 명맥은 유지하되 사

3) 통일에 대한 예감도 없던 1988년 낙후된 독일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해 대학교육 기본법을 개정하였거니와 그 내용은 주로 지구화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권 강화, 연구력 증강을 목표로 한 것이다. (<http://www.bmbf.de/de/757.php>).

4) 통일과정의 교육통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Köhler, Knauss, & Zedler(2000)을 보라.

5) 일단 독일 대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현재 독일에는 모두 359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으며 이 중에 종합 대학 및 통합 대학(Gesamtshochschule)이 99개, 교육대학이 9개, 신학대학이 17개, 예술대학이 50개, 전문대학이 158개, 행정 전문대학이 29개 등이다. 그 중 95개만이 사립대학이다. 2002년말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수는 194만 명이며 여학생의 비율은 47.3%이고, 대학 대 전문대학의 학생비율은 70:30 정도이다 (<http://www.bmbf.de/de/757.php>).

6) 단적인 예로서 1989년부터 1997년 사이의 인구 당 연구개발 투자는 일본이 482\$에서 715\$, 미국이 581\$에서 794\$로 증가한 반면, 독일은 488\$에서 511\$로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증감추이는 1981년부터 1989년 통독이전까지는 2.47%에서 2.87%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 2.75%로 감소하여 1996년 2.30%로 최저수준에 도달한 뒤, 1997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9년 2.41%까지 회복되었지만 80년대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BMBF, 2000: 457). 이는 몇몇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2.2%(1998), 영국 1.87%(1997), 미국 2.77% (1998), 일본 2.91%(1997), 스위스 2.74%(1997), 스웨덴 3.85%(1997) 등임을 감안할 때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BMBF, 2000: 512-513). 가장 최근 통계로는 이 비율은 2003년 2.52%가 증가하였다(<http://www.bmbf.de/de/2303.php>).

면초가 격으로 죄어오는 경제문제로 개혁의 부담이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거기다가 유로화 도입으로 금물살을 타고 있는 EU 통합과정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학문과 대학에도 점점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2년 대대적인 대학 개혁에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 이른바 '의제 2010 (Agenda 2010)'이라는 사회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활발하게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bmbf.de/pub/hrg2_0020815.pdf; <http://www.bmbf.de/de/655.php>).

첫째, 대학의 운영과 조직의 개혁이다. 무엇보다도 관료화되고 경직된 대학조직을 민주화하며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인적구성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2002년에 개정된 연방 대학 기본법과 '대학교용법

(Hochschuldienstrecht)'이 그렇다. 이에 따라 우선 그동안 엄격히 서열화되고 폐쇄적이었던 직제에서 벗어나 '주니어 교수 제도(Juniorprofessur)'를 도입하여 젊고 참신한 연구인력의 수혈을 감행했다.⁷⁾

둘째, 대학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제도가 지나친 재학기간의 장기화,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낳았고 이를 통해 직업 진입연령의 고령화 등의 폐해가 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미국식 학사(Bachelor) 및 석사(Master) 제도를 과감히 수용하여 기존 학·석사 공통과정과 더불어 일종의 '조절 가능한 교육과정(modulare Studiengänge)'을 도입했다(<http://www.bmbf.de/de/888.php>).

셋째, 대학교육의 확산 및 명문대학 육성방안이다. 한편 유럽에서도 뒤떨어진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⁸⁾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의 평등과 민주성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던 이른바 평준화된 대학문화를 이제 경쟁과 성과에 따라 10개 정도의 대학을 집중

7) 이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교수임용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식 교수임용 제도에 비해 박사 학위 후 교수자격(Habilitation)까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연령은 40세이다. 급변하는 시대정황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사 이후 이른바 주니어 교수로 대개 3년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경험을 쌓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 보수 또한 성과급, 연봉제로 경쟁과 업적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이다 (http://www.bmbf.de/pub/faq_zur_juniorprofessur.pdf).

8) 전통적인 대학의 엘리트 교육문화와 중등교육의 인문 및 실업계 이원적 학제(Dualsystem)에 따라 독일은 여타 산업국가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은 편이다. 예컨대 OECD 국가들의 최근 평균 대학 진학률은 47%인데 비해 독일은 35%에 머물고 있다 (<http://www.bundesregierung.de/Politikthemen/Agenda-2010-11616/Hochschulen.htm>). 참고로 한국은 지난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중등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이 74.2%에 이른다(<http://www.nso.go.kr/Magazine>).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주로 대학생 '생활비 지원 제도(Bafög)'의 개선 등 재정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의 확산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5년 동안 대학 진학률은 27.7%에서 35.7%로 8% 포인트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http://www.bmbf.de/press/1179.php>).

지원하여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⁹⁾ 위에 언급한 '의제 2010'의 핵심 사안인 교육 개혁안이 바로 양적 확산과 질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독일 현행 대학교육 정책의 기본방침이다.

IV. 나오며 : 독일 대학교육 개혁의 비틀거림에서 배우기

이렇게 볼 때 독일 대학은 지금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대학문화, 곧 근대 대학의 이상을 설정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기존의 대학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 아니 변혁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구화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든 문명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대해 독일 대학 나름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에서 온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의 확장과 더불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럽 차원의 대학개혁 담론, 주로 미국식 모형에 따른 표준화와

수월성의 강조 등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줄속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널리 알려진 PISA연구 결과이래 독일의 교육담론은 전통보다는 효율성, 수월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¹⁰⁾ 전형적인 경제 중심주의에 따른 인적자원 활용의 교육담론이 아닐 수 없다(Fuchs, 2003). 사실 오늘날과 같은 문명 전환기에는 이런 교육의 수단화, 경제요소로서의 환원으로 다양다기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도, 또 그에 따른 막중한 교육과제를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징후를 제대로 읽고 이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근본적 성찰이 중요하다. 예컨대 정보 및 기술과학의 발달과 그 교육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나, 지나친 컴퓨터 의존으로 디지털화 되어가는 인간, 합리성 중심의 경제주의적 경향,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집단화와 조직화의 성향, 그에 따른 인간의 객체화와 소외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문명에 직면하고 그 '물화(Verdinglichung)'를 극복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그것이다(von Hentig, 2002).

9)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독일 대학문화의 전통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일단 그 계획은 아주 야심차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3억 8천만 유로(약 5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정도의 중점대학과 우수연구센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http://bundesregierung/de/sevlet>).

10) 지난 2000년 실시하여, 2001년 말 그 결과를 발표한 'OECD 주최 국제 학생 학력비교 연구 프로그램(OECD 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이 그것이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32개국에서 기초 교육과정 이수단계인 15세 청소년 약 265,000명의 수학, 자연과학, 독해력 등 기초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가늠하는 영역의 학력수준을 비교 평가한 결과 한국은 수학 2위, 자연과학 1위, 독해력 6위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핀란드, 일본과 더불어 높은 학력수준에다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의 학력 편차(偏差)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평준화가 상당히 진행된 나라로 인정받았다. 반면에 독일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여 큰 충격을 불리일으켰으며, 이러한 결과와 그 대응책에 대한 교육학 및 교육정책의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Deutsches PISA Konsortium 2001: <http://www.pisa.oecd.org/knowledge>).

이렇게 볼 때 독일 대학교육, 특히 최근 대학 교육개혁의 비틀거리는 행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복잡한 교육상황을 되짚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람 생각하고 사람 대접하는 인간이 살아있는 대학문화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Arbeitsgruppe Bildungsbericht am Max Planck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1990). *Das Bildungsβ wesen in der Bundesrepublik*.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Blankertz, H.(1982). *Die Geschichte der Pädagogik*. Wetzlar: Büchse der Pandora.

BMBF(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00). *Bundesbericht Forschung*. Bonn: BMBF.

Deutsches PISA Konsortium (Hrsg.) (2001). *PISA 2000. Basiskompetenzen vo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Opladen: Leske + Budrich.

Fuchs (2003). “Auf dem Weg zu einem Weltcurriculum? Zum Grundbildungskonzept von PISA und der Aufgabenzuweisung an die Schule”. In: *Zeitschrift für Pädagogik*. Heft 2/2003.

Gamm, H. J.(1964). *Führung und Verführung*. Pädagogik des National-

sozialismus. München: List. von Hentig, H.(2002). *Der technischen Zivilisation gewachsen zu bleiben*. Weinheim: Beltz.

Hochschulrahmengesetz (2002). <http://www.bmbf.de>.

Köhler, G., Knauss, G., & Yedler, P.(Hrsg.)(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ß 1990*. Opladen: leske + budrich

Wesel, U.(2002). *Die verspielte Revolution. 1968 und die Folgen*. München: Blessing.

정유성

서강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독일 München대학에서 교육학 Magister(학석사 공통과정)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 연구위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교육개혁과 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국장, 교육부 정책 심의위원,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 자문위원, 여성부 정책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원장,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따로와 끼리 : 남성지배문화 벗기기』, 『사람살려, 교육살려』, 『문화개방과 교육』(공저), 『평생교육학』(공저) 외 다수가 있다.